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Q&A

2024. 4.

들어가며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민생토론회라는 것은 이겁니다.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그리고 뭐든지 바로 한다! 입니다.”

-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2차) 대통령 모두발언(2024.4.4.) -

1. 대통령께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부에 별도 부서 신설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2차) 대통령 모두발언

-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다시피,
 -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 *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 ('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8천 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2천 명을 제외한 18,626천 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
 -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권익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부서 신설을 지시
- 고용노동부에 신설될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 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중장기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 윤석열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이 보장한 권익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음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나?

-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증시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
 - 개인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 대주주 주식양도세 개선, 금투세 폐지, ISA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하며,
 - 상장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도 추진 중
 - * 최근에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준비 중

- 최근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 코스피 지수: ('23말) 2,655.3 ('24.1.17) 2,435.9 (2.26) 2,647.1 (3.26) 2,757.1 (4.3) 2,707.0
 - ** 외국인 순매수(코스피): ('23.1q)7.1조원 (2q)5.2조원 (3q)△4.0조원 (4q)3.1조원 ('24.1q)15.8조원
 -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시장을 성장시키며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

3-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근로장려금 등을 「결혼 페널티 3종 세트」로 선정한 이유는?

- 그간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년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 지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보좌역의 의견이 있었음
- 이 의견을 바탕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층이 가장 개선되기를 원하는 3가지 지원사업*의 적용요건을 완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 연합산소득 기준 7.5천만 원 → 1억 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연합산소득 기준 1.3억 원 → 2억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연합산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

3-2. 이번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추가한 청년 대책은?

□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

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
7.5천만 원 → 1억 원, 상향

②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 :
1억 3천만 원 → 2억 원, 상향

③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3천 8백만 원 이하 → 4천 4백만 원 이하, 상향

3-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행 시기는?

☞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만기,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중으로,
-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사례별 적용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후 시행할 계획

3-4. 요건 완화시 수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 기존에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들 중심으로 지원 확대될 전망

-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완화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출산 가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인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획, 대출 이용 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수는 다소 유동적

참고 1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개요

구 분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부부합산 年 2억 원 이하 (종전은 年 1.3억 원 이하) ▶ (구입)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전세)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부부합산 年 1억 원 이하 (종전은 年 7천 5백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4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 5억 원 ▶ (전세) 3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대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無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25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주택금융공사 보증)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참고 2**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현황 ('24.3.31. 기준)**

(단위 : 건, 억 원)

구 분		건 수(비중)		금 액(비중)	
합 계		18,358	(100%)	45,246	(100%)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소계	13,236	(72%)	35,645	(79%)
	대환	9,055	(49%)	22,762	(50%)
	신규	4,181	(23%)	12,883	(29%)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소계	5,122	(28%)	9,601	(21%)
	대환	2,571	(14%)	4,565	(10%)
	신규	2,551	(14%)	5,036	(11%)

4.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배우자를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이유는?

-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은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 국내 생활에 적응되어 가사·육아·간병 분야에서
일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사용자
에게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효과
 - 서비스가격도 돌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

5. 중국 불법 어업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지난 3.25일부터 31일까지 해수부·해군·해경청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

* (기간) 3.25(월)~31(일) / (단속지역) 서해 NLL해역 및 서해·제주권 배타적경제수역 / (단속세력) 국가어업지도선 4척, 해경 함정 14척·항공기 3대, 해군 군함 12척

○ 1주일간 불법 어업 어선 5척 나포, 58척 퇴거·차단, 1명 구속, 1척 몰수, 담보금 4.5억 원 부과 등 성과

○ 또한, 제주도 남서방 우리 EEZ 내에 설치된 불법 안강망 어구 20통을 발견하여 철거(3.26~4.1)하여 동일 기간 대비 역대 최다 철거실적 달성

* 안강망 수거 실적 : ('20년, 4.18~28) 34통 → ('21년, 9.8~12.28) 1.5통 → ('22년, 4.19~28) 43통 → ('23년, 9.27~12.10) 1.5통

□ 서해 전역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도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하는 등 불법 조업이 크게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서해 NLL 해역에서 단속前 최대 4~6해리까지 남하 조업, 단속 활동 중 NLL 남하 조업 감소, 허가 수역 조업 척수도 전년 동기 ('23.3.25-31) 250척 대비 173척으로 30% 감소

6. 구비서류 제로화 내용 및 향후 계획은?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민원 처리기관에서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임
 - *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연말까지 난임부부 시술비·검진비, 예방접종비 지원, 고용장려금, 공영주차장 할인 등 421개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 할 예정이며,
 - '26년까지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1,498개 모든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아울러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확대 추진
 - '24.2.19일부터 통신사에서 가족 결합할인 신청 시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온라인 대환대출 성과는?

-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24.1월 주담대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후 총 17만 명이 7.4조 원 규모의 대출 이동
 - ▶ 신용대출 14만 4천 명, 3.4조 원,
 - ▶ 주택담보대출 1만 7천 명, 3.1조 원,
 - ▶ 전세대출 5천 3백 명, 9천억 원 수준
- 이용자 1인당 평균 1.54%p, 153만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남

<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24.3.25일 12시 누적기준)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차주	144,320명	16,909명	5,351명	166,580명
대출이동 규모	3조3,851억 원	3조1,274억 원	9,206억 원	7조4,331억 원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52%p	1.37%p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원	281만원	236만원	153만원

- '24.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

* 차주 명의의 소유권 등기 및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

- '24.6월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09~16시→09~22시)

*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개선) 3개월 이후~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 '24.9월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대상에 포함

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23.2), 청주('23.5), 서초구('24.1), 동대문구('24.2)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으며, 부산시 16개 구청과 군청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
 - 대형마트가 출점해 있는 전국 147개 기초지자체 중 부산을 포함해 64개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가능해짐
- 대형마트 주말 영업으로 주민편의가 증대되고, 인근 중소상점들의 동반 매출 증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주말영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강원과 전남 등 지방의 소비자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발의하여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민생토론회 이후 단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통신비 부담 경감과 관련한 구체적 성과는?

-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이 이통사의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제약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보고 제5차 민생토론회(1.22)를 계기로 폐지 추진
-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최고 50만원 (KT, LGU+) ~ 60만원(SKT)까지 인상

< 이통사 공시지원금 상향 동향 >

(단위: 천원)

구 분	SKT			KT			LGU+		
	'24.1월	'24.2월	'24.3월~	'24.1월	'24.2월	'24.3월~	'24.1월	'24.2월	'24.3월~
최고요금제	200	489 (289 ↑)	600 (111 ↑)	240	480 (240 ↑)	500 (20 ↑)	230	500 (270 ↑)	500 (-)
주요요금제	135	336 (201 ↑)	425 (89 ↑)	147	350 (203 ↑)	450 (100 ↑)	133	357 (224 ↑)	442 (85 ↑)

- 특히,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환지원금 지급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함에 따라
 - 이통사가 최대 약 3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

< 이통3사 전환지원금 현황('24.4월 현재) >

구 분	SKT	KT	LGU+
최초시행(3.16)	단말기 5종, 5~12만원	단말기 6종, 5~13만원	단말기 4종, 3~10만원
변경(3.23~)	단말기 10종, 5~32만원	단말기 9종, 5~33만원	단말기 7종, 3~30만원

10.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
- 단기적으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운영가능한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16년까지 늘리겠음
 - 현재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
 - 이 기간을 최대 16년까지 늘리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 * 「농지법」(’24.1월 개정 완료)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4~5월) → 법제처 심사(6월) → 개정·공포(’24.7.3.))
- 장기적으로는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 전용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스마트농업법」 시행(’24.7.26.)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추진(하반기)

11. 24차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 수,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가? 또, 대통령이 이동한 거리, 만난 국민 숫자는?

- (정책과제 수) 240개 과제
- (입법 추진현황) 입법계획 총 123건 연내 추진 - 법률 총 85건, 하위법령 총 38건
 - ※ 법률(85건) : 국회통과 4, 계류 중 45, 제출필요 36
 - 하위법령(38건) : 정비완료 12, 정비필요 26

※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성과 - 단기간 내 입법으로 국민성과 체감도 제고

- 국회통과 법률 (4건)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 정비완료된 하위법령 (12건)
 - 주택규제 완화 : 주택법시행령 등 4건, 소득세법시행령 등 2건
 - 국민부담 경감 : 식품위생법시행령 등 3건, 단말기유통법시행령 등 3건

※ 향후 입법 추진대책

- 국회통과 필요 45건, 국회제출 필요 36건, 정비 필요 하위 법령 26건
 - 신속하고 전략적인 입법 추진 : ▲계류법안 국회처리 총력, ▲ 제출 필요법안 신속 제출, ▲하위법령 연내 조기 정비

- (이동한 거리) 5,570km - 서울~부산의 10배 이상 거리
- (만난 국민 수) 1,813명, 만 13세~88세